

종합·국제

■범여권 대통합 신당 창당 주역 김호석 의원

“보수·진보 아우르는 실용정치 추구”

범여권 대통합 신당 창당의 견인차 역할을 한 김호석 의원(당양·장성·곡성)의 심경은 요즘 그리 편치 않다. 밀려드는 격려 전화 가운데서도 ‘이런 잡탕식 신당을 만들려고 민주당을 탈당했느냐’라는 항의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의원을 만나 대통합 신당의 진정성과 향후 진로 등에 대해 들어봤다.

- 대통합 신당이 집합식으로 급조된 ‘도대우리당’이라는 지적이 있다.

▲ 민심을 따라 중도개혁세력이 하나가 되는 과정을 잡탕식으로 비난하는 것은 민심을 외면하는 것이며 수구병전식 사고다. 민주당 분당 이후 분열된 중도개혁세



“잡탕식·도대우리당 비난은 민심 외면하는 냉전식 사고”

력이 한데 모여 한나라당 독점과 수구병전세력의 집권을 막아내자는 것이 대통합 신당이다. 지금의 정치 현실에서 대통합 신당의 구성 과정에 열린우리당 의원이 많은 것은 불가피하다.

- 대통합 신당 창당과 관련, 동교동 각본론과 함께 민주당 내부의 권력 투쟁론이 제기되는데.

▲ 이런 이야기 자체가 서글프다. 대통합 신당 추진은 시대적 소명에 충실해야 한다는 소신에 따른 것이었다. DJ의 뜻이 대통합에 크게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

각살우(矯角殺牛)의 어려움을 범해서는 안된다. 열린우리당 합류 문제는 민심에 따라 결정 지어질 것이다.

- 통합민주당 합류 문제 등은 어떻게 되나.
▲ 통합민주당의 참여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우리가 탈당한 배경은 대통합이 아니고는 50년 민주당의 참모습을 재건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박상천 대표가 대승적 판단을 하실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앞으로 만들어질 신당의 당명에는 반드시 민주당이라는

정강·정책등 민주당 계승 박상천 대표 대승적 결단 기대

이름이 들어갈 것이며 정강·정책 등에서도 민주당의 역사를 계승·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 대통합 신당의 정체성과 비전은

▲ 대통합 신당은 특정인물 및 세력이 중심이 아니다. 한국 정치의 한 축인 중도진보 혹은 중도개혁의 축을 복원해 내는 과정이다. 이념적으로는 중도진보를 표방하겠지만 경제적 측면에서는 보수와 진보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제3의 길, 실용정치를 추구해 나갈 것이다.

▲ 국민적 심판이 내려진 열린우리당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새로운 정당의 밑거름이 돼야 한다. 그러나 빨을 바로 세우자고 대통합이라는 소를 죽이는 ‘교

/임동욱 기자 tuim@

이명박-박근혜, 고소전 재연되나

차츰 입법보좌진, 최목사 관련李측 박형준 대변인 고소 방침

한나라당 이명박 전 시장의 처남 김재정 씨의 박근혜 전 대표 측 인사에 대한 고소 취소로 일단락될 듯한 고소전이 재연될 전망이다.

박 전 대표의 입법보좌진 3명은 이르면 주초 이전 시장 캠프 대변인 박형준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 25일 박 의원이 박 전 대표와 관계있는 것으로 알려진 고(故) 최태민 목사의 부정축재 의혹 등을 제기하면서 “박 전 대표의 입법보좌진인 L, 또 다른 L, J 씨 등이 최태민 씨와 친인척 관계라는 믿을 만한 제보가 있다”고 주장한 데 따른 것.

박 전 대표의 입법보좌진들은 “당 사자에게 확인도 않고 마음대로 혈연 관계까지 바꾼 어처구니 없는 허위 비방”이라면서 “사실관계가 명확히 드러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명확히 쟁고 넘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 캠프 관계자도 “L 씨 등 입법보좌진들은 지난 98년을 전후해 주로 대학교수들의 소개로 박 전 대표가 직접 면접을 보고 뽑았다”면서 “최씨의 친인척이란 주장은 터무니 없다”고 반박했다.

당초 박 전 대표 측은 박 의원에 대해 공개사과를 우선 촉구한 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응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당사자들이 사안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최근 열린 한 행사에 참석, 서로 다른 곳을 응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 심각성을 고려, 법적 대응을 밝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물론 박 전 대표 측도 당 지도부까지 나서 김재정 씨의 고소 취소를 종용한 뒤 고소고발 사태가 겨우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 마당에 다시 고소장을 제출하는 게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탈레반 한국 인질 사건으로 한나라당 내부 분란이 수그러드는 분위기에서 다시 갈등을 조장한다는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박 전 대표의 입법보좌진들이 고소를 강행한 것은 최 목사와 관련한 의혹제기를 그대로 둘 경우 중반전으로 치닫는 경선에서 자칫 박 전 대표의 도덕성에 흠집이 날 수도 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과거완료형’에 머물던 최 목사를 박 의원의 문제제기로 ‘현재진행형’으로 되살리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차원에서 고소라는 강경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속내다. 이 전 시장과

의 지지 격차를 좁혀가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논란 거리를 제공할 경우 그 추세가 멈출 수도 있다는 전략적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이 전 시장 측 장광근 대변인은 “문제의 본질은 결국 현재 박 후보를 에워 싸고 있는 그들과(최 목사가) 연관관계가 있다는 것”이라면서 “박 후보가 아직도 의혹의 고리를 끊지 못한 것은 사실 아니냐”고 말했다. /연합뉴스

日 참의원 선거 자민당 참패

“노근리 학살, 美 기병대대장이 지시”

다카오 日 게이오대 교수 학술대회서 주장

다카오 마츠마라 일본 게이오대 명예교수가 오는 8월1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개최되는 ‘제1회 노근리 국제평화학술회의’에서 미군 제5기병연대 제2대대장이 노근리 민간인 학살 명령을 내렸다고 주장하는 논문을 발표한다.

생시간 등을 고려할 때 노근리에서 민간인을 사살한 부대는 제5기병연대 제2대대이며, 제2대대장이 사살을 지시한 것으로 추정했다. 다카오 교수는 “이 자료에 기록된 비무장 난민은 노근리의 희생자인 것으로 보인다”며 “미군은 난민이 무장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공격을 가했다”고 비판했다. 1950년 7월 25일부터 4일간 총

북 영동 노근리의 쌍굴다리에 피신하고 있던 민간인 수백명을 미군이 사살한 사건인 노근리 사건의 핵심 쟁점은 양민을 사살하라는 미군의 명령이 존재했는가를 가리는 것이었다.

양민학살이 전장의 혼란으로 발생한 우발적인 사건이었다면 미국 정부는 유감표명만으로 끝낼 수 있었지만 미군의 명령체계에 의해 공식적으로 하달된 ‘살상명령’이 있었다면 미 정부는 이에 사과하고 희생자에게 보상을 해야 할 것이다. /연합뉴스

아베 총리 거취 주목

일본 자민당이 29일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 참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8시 투표가 종료된 뒤 발표된 NHK 방송의 출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민당은 새로 뽑는 121명 가운데 31~43석을 차지하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야당인 민주당은 55~65석을 획득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기존 의석을 포함할 경우, 민주당이 참의원 내 제1당이 될 것이 확실시된다. 자민당은 공명당의

8~12석을 합쳐도 여당으로서 원내 과반 의석에 모자라게 된다.

이번 참의원 선거는 아베 신조 일선 총리 정권의 운명을 결정하는 선거로 결과에 초미의 관심이 쏠려 있다.

29일 오전 7시 전국 5만2천여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된 선거는 오후 8시에 돼 곧바로 개표에 들어갔다.

총무성은 이날 오후 2시 현재 투표율이 27.7%로서 3년 전인 2004년 참의원 선거 당시 같은 시간대의 투표율보다 0.08% 포인트 높다고 밝혔다. 총무성은 또 부재자투표 마감 결과

최종 투표자 수가 전국에서 1천79만8천997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3년 전보다 50.58% 증가한 것으로, 총선에서 부재자투표가 1천만명이 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베 총리 취임 이후 처음 치러지는 총선인 이번 선거에서는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참의원 정원의 242석의 과반수인 122석 이상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이였다.

자민당은 투표일인 이날 성명을 내고 “개혁에 속도를 내 장래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활력이 있는 미래를 실현하겠다. 이번 선거는 우리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선거다. 국민

의 이해와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으나 결과는 참담한 패배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성명에서 “민주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자민·공명당 정권은 갈수록 국민 생활과 우리 나라를 희망이 없게 만들었다”며 “국민의 생활을 첫번째로 삼는 개혁은 민주당밖에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선거전에서 자민당과 공명당 등 여당측은 공무원 낙산 인사 방지 대책과 교육기본법 개정 등 현 정권의 실적을 집중 강조하며 지지율 호소했다. /연합뉴스

공인중개사 전국수석 1위. 8월 1일 첫진도 개강. 광주고시학원. 주택관리사. 227-8303, 228-8999, 227-8302.

한자한문지도사 자격 연수생모집. 1. 원수입금(4백만원). 2. 원수입금(4백만원). 3. 원수입금(4백만원).

HANIL EXPRESS. 한일카-웨리호로! 원도·영주 무덤 서해버스여행. 2007 전국수석 1위. 2007 전국수석 1위.